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35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전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을 하나의 조례로 정리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대전광역시 평생교육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 및 운영재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7, FAX 042-270-5039, E-mail : ychm1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사업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임기)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평생교육진흥 사업)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8조(진흥원의 사업) ① 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4.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10조(출연금 및 운영재원)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정부의 지원금
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4. 그 밖에 진흥원의 사업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제11조(결산)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보험 등의 가입)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협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설립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제7조에 따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평생교육법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23.>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행일 : 2019. 10. 24.] 제20조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

- 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게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현행)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6.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7. 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 삭제 <2016.8.12.>

제6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설립비용,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결산)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제출 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①시장은 진흥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시장은 진흥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8조(진흥원의 사업)
3.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 나. 추계 결과 : 18,305백만원
 -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별첨)
 - 라. 재원조달방안 : 시 출연금 확보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지속적 시 출연금 확보 필요
5. 작성자 : 교육복지청소년과 행정6급 허인숙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 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출		12,354	1,531	1,429	1,473	1,518	18,30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출연금	9,000	694	714.5	736.5	759	11,904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교육청 부담)		3,354	837	714.5	736.5	759	6,401